

# 일제강점기 도청사·부청사의 설계주체와 설계과정\*

Planning Organizations and Planning Process of To(道) and Pu(府) Government Office Building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uthor 김명선 Kim, Myungsun / 정회원,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 were two kinds of architectu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side the Chosun(朝鮮) Governor-General which designed To(道) and Pu(府)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ne was the organization inside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the other inside the local government offices(To and Pu). By the administrative approval procedure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 the local architectural organization planned site and floors of the building in the schematic design stage, and in the detail design stage not only the central but sometimes the local planned the building design. The design accomplished by the local in schematic stage was believed as a kind of guideline in detail design and the local organization was able to insist their own needs to the central and to change the central's planning. Even though the central had the authority of the design, the local took part in the planning of To and Pu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t least in the schematic design stage.

Keywords 도청사, 부청사, 설계  
To(道) government office building, Pu(府) government office building, Planning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관청인 도(道, 1910년 13도 지정: 경기·강원·황해·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평남·평북·함남·함북)와 부(府, 1910-1944년에 걸쳐 23부 지정: 경성·인천·부산·마산·대구·목포·군산·평양·진남포·의주(1914년까지)·원산·청진·신의주(1932년까지)·개성·함흥·광주·전주·대전·나진·해주·진주·성진·홍남부)는 식민지조선의 도시 발달을 견인한 주요 기관이었다. 도·부의 청사인 도청사와 부청사는 기존건물을 전용한 것이었다가 건물이 너무 낡고 직원이 증가해 좁아지거나 화재로 소실되거나 청사 소재지를 옮기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축되는데, 약 20년간에 걸쳐(1920-1939) 느릿하게 진행된다.<sup>1)</sup>

최근 일제강점기 도·부청사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그 평면형상·실구성·구조·양식 등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sup>2)</sup> 반면 도·부청사의 설계주체와 설계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비주거 건축의 1920-30년대 양식 변화에서 관(官, 조선총독부) 건축조직 설계의 보수성을

검토하고<sup>3)</sup> 조선총독부 건축부서의 변화를 추적하면서<sup>4)</sup> 간단히 언급하거나, 부산부청사 설계·공사과정에서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의 주도적 역할을 고찰하는<sup>5)</sup> 정도에 그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료 부족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료 발굴에 힘써 도·부청사 설계주체와 설계과정의 일단을 밝히도록 하겠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취한다. 잡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조선총독부와 도·부 간에 오고간 공문서(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공문서), 신문(동아일보·매

- 1) 김명선·박정대, 일제강점기 도청사·부청사의 건립,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2호, 2008.2, pp.195-206.
- 2) 김명선, 일제강점기 신축된 도청사·부청사의 평면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5호, 2008.5;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청사 평면의 변화,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1호, 2008.3;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청사 및 부청사의 양식적 특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2호, 2008.6;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사무분장파 도청사의 규모 및 평면구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3호, 2008.9.
- 3) 송석기, 한국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양식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4)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5) 이금도·서치상, 1936년에 완공된 부산부청사의 입지와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11.

\* 이 논문은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0-0017310).

일신보), 관련 법령(조선총독부관보)을 1차 자료로 하고 기존연구도 참고하였다. 주요 자료에 제한이 있었다. 1차 자료의 도면이 대부분 평면도이기에 평면계획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다만 '설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텐데, 이는 1차 자료에서 단순한 평면계획이라 해도 '설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도의 수는 13개였으나 도청사는 18개 있었다.<sup>6)</sup> 그중 기존건물 전용은 경기(수원·경성)·경남(진주·부산)·경북·충남(공주)·강원·평북(의주)·함북(경성)의 9개, 신축은 나머지 9개다. 신축된 9개 중에서 충남(대전)·평북(신의주)·함북(나남)의 3개 도청사는 도청소재지를 옮기면서 신축되었다.<sup>7)</sup> 이들을 '특수한 경우의 신축'이라 하겠다. 나머지 6개(전남·전북·충북·황해·평남·함남) 도청사는 기존 부지에 신축되었다. 이를 '일반적 경우의 신축'이라 하겠다. 한편, 일제강점기 부청사는 23개 있었고, 신축 없이 기존건물을 계속 전용한 2개(대구·목포), 신축 13개(경성·인천·개성·부산·마산·군산·전주·대전·평양·신의주·원산·함흥·청진부청사), 미확인 8개(진주·광주·해주·진남포·의주·홍남·나진·성진)이다. 신축된 부청사는 모두 '일반적 경우의 신축'에 해당한다.<sup>8)</sup> 연구의 범위는 1920-1939년까지 신축되면서 자료를 통해 설계주체를 알 수 있는 도·부청사로 제한한다. 당시 기존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을 때 '개축'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신축에 포함되기에 연구 범위에 포함했다.

## 2. 도·부청사의 설계주체

### 2.1.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의 이원화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관제를 공포하여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바로 아래 정무총감, 그 아래 중앙관서와 소속관서를 두는 조직을 정비했다. 중앙관서는 총독부 직할관제로서 총독관방·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의 1관방 5부가 있었고, 소속관서에는 각도(各道\_중추원·경무총감부·재판소·철도국·전매국·임시토지조사국이 있었다. 이렇듯 조선총독부 조직이 중앙관서와 소속관서로 분할되면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양 조직에 각각 존재하게 된다. 이 관제에서 건축업무와 토목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의 부서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가 건축업무를 주로 담당했다.<sup>9)</sup>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건축조직이 부서를 옮기는데<sup>10)</sup> 도·부청사가 신축되는 1920-1939년 사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총독부 중앙관서 건축조직의 소속 변화(1920-1939)

시기	소속	근거 훈령
1919. 8. 20- 1921. 4. 7	총독관방 토목부 영선과	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9.8.20)
1921. 4. 8- 1924. 12. 19	토목부 건축과	조선총독부훈령 제22호(『조선총독부관보』 2595호, 1921.4.8)
1924. 12. 20- 1929. 11. 7	내무국 건축과	조선총독부훈령 제55호(『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24.12.25)
1929. 11. 8- 1945. 8. 15	총독관방 회계과	조선총독부훈령 제53호(『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29.11.8)

가장 큰 변화는 1929년 11월 8일 관계개정으로 건축조직이 총독관방 회계과와 통합되어 '영선과' 혹은 '건축과'라는 부서명이 사라진 것인데, 불황에 대처해 조선총독부가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부서들을 통폐합했기 때문이다.<sup>11)</sup> 비슷한 시기에 건축조직의 인적구성도 달라진다. 1920년대 '건축과장'(1921-1929년)으로 조직을 지휘하던 암정장삼랑(岩井長三郎)이 1929년 11월 퇴직하고 그 아래 중도맹부(中島猛矣)·암규선지(岩槻善之)도 연이어 사퇴·사망하면서, 남아 있던 세경일(笹慶一)이 1931년경부터 1938년 퇴직할 때까지 조직을 이끈 것이다.<sup>12)</sup> 즉, 중앙관서 건축조직의 도·부청사 설계는 암정장삼랑이 지도한 전반부(1920년대)와 세경일이 주도한 후반부(193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소속관서의 하나인 도 역시 1910년 10월 1일 설치되는데, 도장관과 그 아래 장관관방·내무부·재무부를 두었다. 건축조직은 '영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배치되는데, 도·부청사가 신축되는 1920-1939년 사이 각 도의 건축조직이 소속하는 부서를 정리한 것이 <표 2>다. 이 표를 보면, 1920년대 전반기 약 4년(1921.12.24:경기-1925.2.14:전남) 사이에 경남·함남·충북을 제외한 10개 도의 내무부 토목과에 건축조직을 두는 훈령이 내려진다.<sup>13)</sup> 이후 내무부 회계과로 소속이 바뀌는

6) 임시사용을 위해 간단히 지은 가정사(假廳舍) 3건은 제외한 개수다. 5개 도(경기·경남·충남·평북·함북)가 도청소재지를 한 차례 변경해서 이를 전후해 2개 도청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김병선·박정대, 일제강점기 도청사·부청사의 건립,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2호, 2008.2, p.19.  
7) 경기·경남도 도청소재지를 옮겼지만 다른 용도로 준공된 건물을 전용하면서 새 도청사를 마련했다. 경기도청사(경성)와 경남도청사(부산)김병선·박정대, 일제강점기 도청사·부청사의 건립,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2호, 2008.2, pp.197-199.  
8) 김병선·박정대, 일제강점기 도청사·부청사의 건립,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2호, 2008.2, pp.199-201.

9) 1910년 당시 건축조직은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 내무부 지방국 토목국, 탁지부 세관공사과에 흩어져 있었다.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52. 각주 읽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매번 서지사항을 적는다.  
10) 자세한 기구변동은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49-60.  
11)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58.  
12)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3권 4호, 2007.4, p.139.  
13) 1910년대 13도의 건축조직 소속부서는 통일되어 있었는데, 장관관방 회계계(1910.10.1)→제1부 회계계(1915.5.1)→제1부 토목계(1916.5.18)→제1부 토목과(1919.8.20)이었다. 1921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8호로 각도의 제1부가 내무부로 일괄 변경되었다. 이후 1920년대 사무분장은 각 도별로 정해진다.

시기의 편차는 약 9년(1922. 2.21:경남-1931.6.15:전남)이다. 함남의 건축조직은 이후 내무부 회계과 소속으로 되 돌아갔다(1928.4.1). 경기도 건축기수 제방조(堤芳助)는 1928년 6월 “도청 영선계의 과 소속은, 13도 중 약 절반 이상은 회계과, 나머지 절반 이하는 토목과에 속한다”<sup>14)</sup> 고 했는데, <표 2>를 보면 당시 8개 도가 회계과 소속 이었다. 1940년 10월 21일부터는 일제히 도 직속으로 전환된다.<sup>15)</sup> 그런데 충청북도 사무분장을 지시한 도훈령은 그때서야 처음 내려진다. 이렇듯, 1920-39년 사이 도 건축조직은 각 도의 사정에 따라 소속부서를 달리했다.

<표 2> 각 도의 건축조직 소속부서 변경과 변경날짜

	내무부· 토목과	내무부 회계과	내무부 토목과	내무부
경기도	1921.12.24			1940.10.21
전라북도	1922.1.1			
평안남도	1922.1.1			
충청남도	1922.1.4	1928.4.1		
함경북도	1922.1.4	1928.4.1		
강원도	1922.1.16	1930.12.1		
경상북도	1922.1.26			
경상남도	*	1922.2.21		
황해도	1923.4.26	1931.4.23		
평안북도	1924.12.15	1931.4.25		
함경남도	*	1924.12.27	1928.4.1	
전라남도	1925.2.14	1931.6.15		
충청북도	*	*		

주1: 1910-1945년 도사무분장 및 도사무분장개정(조선총독부훈령 및 조선총독부각도훈령)에서 '영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정리.  
주2: \* 표시한 경남·함남·충북은 도별 사무분장규정이 발표되지 않았고, 회색 표시는 해당 부서가 없었음을 뜻함.

부는 1910년 10월 도 관할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郡과 함께 편제되고 그 아래 면을 두면서 출발했다. 건축조직의 부서 편제는 부마다 달랐다. 『조선총독부직원록』에 따르면 대체로 부 직속 → 내무과 → 부 직속의 변동을 겪는데, 내무과에 소속되는 시기는 1934-1939년 사이로 조금씩 다르고 1940년에는 부 규모가 일제히 대대적으로 축소되어 부직속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서를 구별하지 않은 청진·나진·성진부 같은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던 부만 살펴보면, 평양부의 건축조직은 1935년까지 부직속·1936-9년 내무과·1940-3년 다시 부직속이었고, 경성부의 건축조직은 1934년까지 부직속·1935-6년 내무과·1937-9년 영선과·1940-1년 공영부·1942-3년 다시 하위부서 없이 부에 소속되어 있다. 경성부에는 건

축기수 관직이지만 2-3년간 내무부 수도과나 부민관에 소속된 직원도 있다.<sup>16)</sup> 부의 건축조직 소속부서 역시 부의 사정에 따라 달랐고 건축직원도 한 부서로 엄격히 구획되기보다는 건축업무가 필요한 과들에 흩어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7)</sup>

## 2.2. 도·부청사의 설계주체

서론에서 정리했듯이, 일제강점기 신축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도청사는 9건(가청사 3건 제외)이다. 그중 설계주체를 확인한 도청사는 6개와 도청 가청사 2개인데, 조선총독부 중앙관서 건축조직과 소속관서 도·부의 건축조직으로 양분된다. 표 3은 이를 기공 순서대로(함북 가청사·황해·전남·충남·함남·충북·평남·강원도가청사) 정리한 것이다. 함북도청 가청사·충남·함남·평남도청사는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황해·전남·충북도청사는 해당 도의 건축조직이 설계했다. 강원도청 가청사는 강원도와 중앙관서 설계조직이 함께 설계했다.

설계자 이름도 몇몇 알 수 있는데 모두 소속관서 직원이다. 전남도청사의 설계자는 산전인삼랑(山田仁三郎, 전라남도 내무부 토목과 기수),<sup>18)</sup> 충북도청사의 '설계장'은 류뢰좌시(柳瀨佐市, 충청북도 내무부 회계과 기수)<sup>19)</sup> 그리고 강원도청 가청사 설계는 근등정부(近藤正夫, 강원도 내무부 회계과 기수)<sup>20)</sup>와 통정승(筒井丞, 중앙관서 소속 촉탁)이 함께 했다. 『조선과 건축』에는 이들의 일부 관직명이 '기사'로 나오지만,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기수'였다. '기수' 직급이 도청사 신축설계를 주도한 것이다. 1928년 경기도의 설계부서 인원은 8명이었고 충청북도는 1936년 도청사 신축설계에 “계원 8명이 모두 관계”<sup>21)</sup>했다고 한다. 여타 도의 건축조직도 기수를 정점으로 이 정도 인원이 설계업무를 맡았을 것이다.

- 16) 경성부 내무과 건축기수 석정축(石井祝)은 3년간(1936-8년) 경성부 수도과 소속으로 일했고 경성부 내무과 건축기수 장우안(張友安)은 2년간(1936-7) 경성부 부민관에 소속되었다.
- 17) 조선총독부직원록에서 '건축기사'나 '건축기수' 관직명이 매우 드물게 등장하고 대부분 '기사'나 '기수' 관직명으로 나온다. 건축기사로써 도 소속은 한 명도 없고 부 소속은 경성부와 평양부에만 있었다. 건축기수도 충청북도뿐이고 부 소속은 경성·평양·함흥부에만 있었다.
- 18) 朝鮮と建築 8집 7호, 1929.7, p.41. 이 자료에는 “山田 기사”로 나오지만, 조선총독부직원록에서 山田仁三郎으로 확인했다. 그는 1921년 전남도청 내무부 도 기수, 1922-30년 내무부 토목과 기수, 1931-2년 내무부 회계과 기수로 근무했다.
- 19) 朝鮮と建築 15집 9호, 1936.9, p.62. 이 자료에는 “柳瀨 기수”로 나오는데, 조선총독부직원록에서 柳瀨佐市으로 확인했다. 그는 1922-30년 내무부 토목과 기수, 1931-41년 내무부 회계과 기수로 근무했다.
- 20) 강원도가청사 五月二十日부터 착공, 동아일보 1940.5.2. 이 자료에는 ‘近藤 기사’로 나오지만, 조선총독부직원록에서 近藤正夫로 확인했다. 그는 1933-1936년 강원도 내무부 회계과 토목기수, 1937-1940년 강원도 내무부 회계과 기수로 근무하다가 1941년에는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회계과 기수가 되었다.
- 21) 朝鮮と建築 15집 9호, 1936.9, p.62.

- 14) 堤芳助, 京畿道の營繕工事實況, 朝鮮と建築 7집 6호, 1928.6, p.10. 堤芳助는 이 글에서 경기도의 “건축사무를 7명의 기술자가 소화”한다면서, 이 인원은 많은 도 건축사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다른 도의 건축조직도 이 인원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 15) 각 부 아래 과를 두고 업무분장했던 이전 규정을 “각 부에 과를 둘 수 있다”고 바꾼데 따른 것이다. 조선총독부훈령 제58호 조선총독부도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1940.10.21, 조선총독부관보 4124호, 1940.10.21.

<표 3> 일제강점기 신축된 부청사의 설계주체

기공	부청사	설계		출처
		중앙관서 설계조직(설계자)	소속관서 설계조직(설계자)	
1925. 3	경성부청사	조선총독부 토목부 건축과 (설계지도 岩井長三郎, 설계주임 笹慶一, 설계담당 岩根善之)		朝鮮と建築 5집 10호, 1926.10, pp.2~6
1928. 7	군산부청사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朝鮮と建築 8집 12호, 1929.12, p.5
1931. 8	신의주부청사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회계과		朝鮮と建築 12집 1호, 1933.1, p.30
1932. 6	인천부청사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회계과		朝鮮と建築 11집 8호, 1932.8, p.32
1933. 3	평양부청사		평남 평양부(설계자 堤芳助)	朝鮮と建築 12집 3호, 1933.3
1934. 12	부산부청사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朝鮮と建築 8집 4호, 1929.4, p.98

\*설계자명 출처: 조선총독부직원록

<표 4> 일제강점기 신축된 도청사의 설계주체

기공	도청사(소재지)	설계		출처
		중앙관서 설계조직(설계자)	소속관서 설계조직(설계자)	
1925. 7	함북도청사 가청사(나남)	내무국 건축과		함북도청 전소, 동아일보 1925.2.11
1927. 12(낙성식)	황해도청사(해주)		황해도 내무부 토목과	朝鮮と建築 6집 8호, 1927.8, p.48
1930. 6	전남도청사(광주)		전라남도 내무부 토목과(山田仁三郎)	朝鮮と建築 8집 7호, 1929.7, p.41
1931. 6	충남도청사(대전)	총독관방 회계과		朝鮮と建築 10집 6호, 1931.6, p.38
1934. 4	함남도청사(함흥)	총독관방 회계과		朝鮮と建築 12집 8호, 1933.8, p.34
1936. 9	충북도청사(청주)		충북북도 내무부 회계과(설계장 柳瀨佐市)	朝鮮と建築 15집 9호, 1936.9, p.62
1937. 8	평남도청사(평양)	총독관방 회계과 영선계		오만원 공비로 평남도청을 증축, 매일신보 1940.6.30
1940. 6	강원도청사 가청사(춘천)	총독관방 회계과(축탁 簡井丞)	강원도 내무부 회계과(近藤正夫)	강원도가청사 11월까지 전부 준공, 동아일보 1940.6.15

\*설계자명 출처: 조선총독부직원록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설계한 도청사 중에서 함북도청사는 1925년 2월, 강원도청사는 1940년 2월 각각 화재로 전소된 후 가청사로 신축되었고, 충남도청사는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기면서 신축되었다. 전자는 화재로 인해 새로운 도청사 설계를 할 만한 시설 등 여력이 부족했을 것이고, 후자는 도청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정서<sup>22)</sup>도 건축조직이 설계를 맡기는 어려웠을 뿐 아니라 새로 이전할 도시에도 도청사를 설계할 만한 건축조직이 없었다.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중앙관서가 설계를 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밖에 일반적인 경우인 황해·전남·충북도청사 설계는 도 건축조직이, 함남·평남도청사는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맡았다. 같은 도청사라 해도 설계주체가 달랐던 것인데, 어떤 기준에 따랐는지는 분명치 않다.

서론에서 정리한대로 신축된 부청사는 13개인데, <표 3>은 설계주체를 확인한 6개 신축 부청사를 기공 순서대로(경성·군산·신의주·인천·평양·부산부청사) 정리한 것이다. 경성·군산·인천·신의주·부산의 5개 부청사 설계는 중앙관서가, 평양부청사는 평양부가 맡아 중앙관서 쪽이 훨씬 많다. 역시 부청사 설계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알려줄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성부청사 설계자로 중앙관서 토목부 건축과 소속 3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설계지도 암정장삼랑, 설계주임 세경일, 설계담당 암규선지”이다. “경성부청 신청사는 총독부 토목부 암규(岩井) 건축과장, 세(笹) 기사 등

의 손으로 설계 입안중”<sup>23)</sup>이라는 기사를 보면, 암정장삼랑과 세경일이 실질적인 설계를 맡고 암규선지가 그 아래에서 도면을 작성한 듯하다. 2.1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경일은 암정장삼랑이 퇴직한 후 부산·인천부청사를 비롯해 1930년대 관청사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부청사의 설계자는 제방조인데,<sup>24)</sup> 설계 당시 그는 평양부 직속 건축기수였다. 도청사와 마찬가지로 부청사 설계 역시 기수가 맡았음을 알 수 있다.

### 3. 도·부청사 설계주체 및 설계안의 변경

#### 3.1. 설계주체의 변경

도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해당 도와 조선총독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을 살펴보면, 도에서 도청사 신축인가를 조선총독부에 요청하면서 구조·층수·면적·공사비 등 내역과 함께 신축(개축)평면도를 첨부한다. 즉, 도 건축조직이 신축도청사 평면을 계획한 것이다. 이는 청사소실·도청이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설계로 신축된 평남·함남도청사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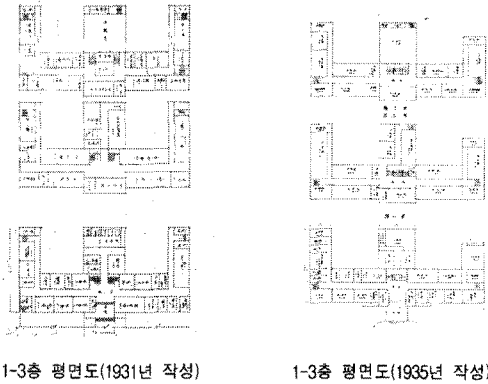
먼저, 평안남도는 1931년과 1935년 두 차례에 걸쳐 도청사 신축계획안을 작성했다.<그림 1>의 左·右는 평안남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앞으로 제출한 「소화6년도 세

23) 朝鮮と建築 2집 9호, 1923.12, p.10.

24) 朝鮮と建築 12집 3호, 1933.3, p.58. 이 자료에는 “堤 기수”로 되어 있으나,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통해 堤芳助로 확인하였다. 그는 1921년 총독부 토목부 영선과 기수, 1922-1930년 경기도 내무부 회계과에서 기수로 근무한 후, 1933-1934년 평양부 직속 건축기수로, 1935-1936년 평양부 내무과 건축기사보로 근무했다.

22) 충남도청 소재지 이전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1996, pp.540-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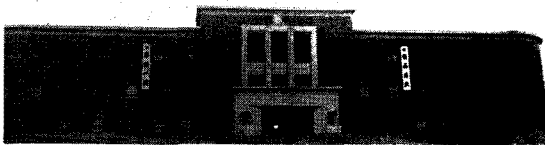
출계획서 제출의 건(昭和六年度歳出計劃書提出ノ件), (1931)과 「소화11년도 세출계획서 제출의 건(昭和十一年度歳出計劃書提出ノ件), (1935)에 각각 첨부된 계획안 평면도로, 철근콘크리트·벽돌 병용조의 3층 건물이고 공사비는 각각 66만6천원, 59만4,750원이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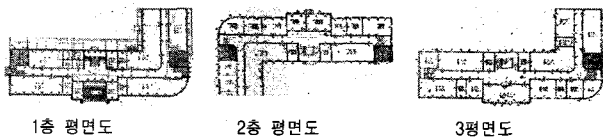
<그림 1> 평안남도 작성 신축계획안 평면도

출처: 국가기록원 문서철 관리번호 CJA0002793, 쪽수 없음  
(이후 'CJA'로 약기하고 자료에 쪽수가 없으므로 쪽수 표기 표시하지 않음)

평안남도의 이른 계획과는 달리 도청사는 1937년 9월에 가서야 기공되어 1939년 8월 준공되는데<그림 2>, 설계는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맡았다. 구조·층수는 같으나 평면은 달라지고<그림 3> 공사비는 26만 7천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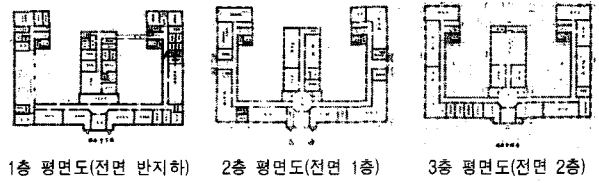


<그림 2> 신축된 평남도청사 정면  
출처: 朝鮮と建築 19집 8호, 1940.8, 쪽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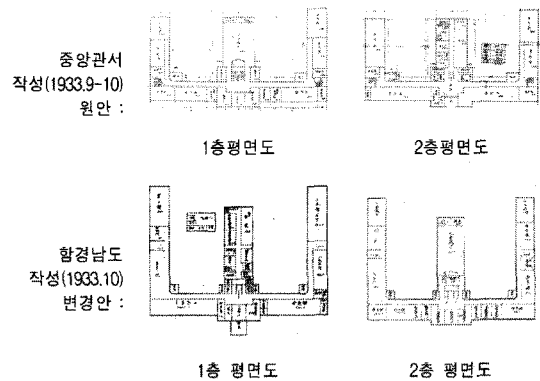
<그림 3> 신축된 평남도청사 평면도  
출처: 朝鮮と建築 19집 8호, 1940.8, 쪽수 없음

이어서, 함경남도가 조선총독부 내무부장 앞으로 1930년 5월 제출한 「소화6년도 세출계획서 제출의 건(昭和六年度歳出計劃書提出ノ件)」 안에 철근콘크리트 3층 구조의 「함경남도청청사 신축공사계획도」(배치도, 1·2·3층 평면도)가 실려 있다<그림 4>.



<그림 4> 함남도청사 작성 신축계획안 평면도(1930년)  
출처: CJA0002793; CJA0003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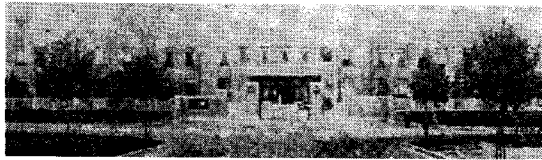
도청사 신축은 1933년 3월에 확정 공포되고 중앙관서 설계조직이 설계를 맡는데, <그림 2>의 상단은 1933년 9-10월 사이 작성된 것이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돌 병용조(바닥은 철근콘크리트조, 벽체는 벽돌조적조)로 바뀌고 규모는 2층으로 축소되며 양단후면돌출부 끝부분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함경남도는 1933년 10월 27일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앞으로 제출한 「함경남도청사 신축에 관한 건(咸鏡南道廳舍新築ニ關スル件)」에서 “한층 인원이 증가될 것이 필연적이니 예산과 대비하면 평수 증가도 현격”할 것이라면서 증가될 인원을 제시한 후 새로운 평면도를 작성해서 첨부한다<그림 5 하단>.<sup>27)</sup> 두 평면도를 비교하면, 중앙관서가 작성한 산자형 평면을 유지하면서 세 후면돌출부를 더 연장하여 면적을 증가시키고 양단에 위치한 계단 위치를 뒤로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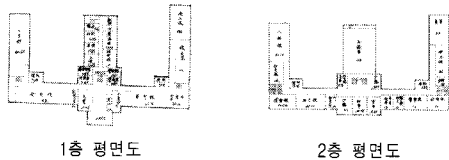
<그림 5> 함경남도 작성 신축계획안·변경안 평면도(1933년)  
출처: CJA0003139

도청사는 1934년 2월 기공되어 1935년 10월 준공되는데<그림 6>,<sup>28)</sup> 1940년 10월 1일 함경남도가 조선총독부 내무부장 앞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도청사에 관한 조사의 건(道廳舍ニ關スル調査ノ件)」에 첨부된 현황평면도<그림 7>를 보면, 도의 요청대로 확장되지 못한 채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산자형 평면의 중앙후면돌출부도 신축된 이듬 해(1936) 증축되었다.<sup>30)</sup>

25) CJA0002793; CJA0003139.  
26) 朝鮮と建築 19집 8호, 1940.8, pp.36-38.  
27) CJA0003139.  
28) 朝鮮と建築 14집 11호, 1935.11, p.53.  
29) CJA0003566.  
30)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청사 평면의 변화,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10권 1호, 2008.3, p.11.



<그림 6> 신축된 합남도청사 정면  
출처: 함경남도지편찬위원회(1968)



<그림 7> 합남도청사 현황평면도(1940년)  
출처: CJA0003566

이렇듯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처음부터 설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청소재지 이전이나 화재로 인한 기존건물의 소실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의 도청사(합남·평남·전북) 신축에서, 합남·평남의 사례를 통해 최종적으로 중앙관서의 설계안대로 지어졌다 해도 초반부에는 도 건축조직이 설계안을 작성했으며 중앙관서의 설계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도의 요구가 반영될 여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북도청사는 자료가 부족해 상황을 알기 어렵다.

이어서 부청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3>에서 정리한 대로 평양부를 제외한 5개 부의 신축 부청사 설계주체가 중앙관서이지만, 부 설계조직 역시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아래 두 인용문은 경성부가 1922년, 평양부가 1923년 각각 부에서 작성한 설계안을 첨부하여 조선총독부에 신축허가를 신청했음을 엿보게 한다.

“경성부청사 건축문제는 오래전부터 연구하는 문예인대 금년 봄에 경성부에서 대개의 설계서를 첨부하여 총독부에 인가를 신청중이었는데...”<sup>31)</sup> (굵은 글자 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본부(本府)[조선총독부: 인용자]의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천연(遷延)해 오다가 이번엔 드디어 본부의 양해를 얻어 昨今 평양부에서는 신축청사 설계를 서두르고 있다. (중략) 설계가 완성되면 총독부에 청사 신축을 신청하기로 되어 있다.”<sup>32)</sup>

인천부 역시 신축을 추진하는 초기에는 인천부청사 평면도를 작성했다. 1930년 6월 14일 경기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앞으로 제출한 「소화6년도 세출계획서 제출의 건(昭和六年度歳出計劃書提出ノ件)」을 보면, 평면도를 첨부하여 1931년 부청사 개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sup>33)</sup> 또한 아래 인용문들은 군산부·마산부·대구부 역시 초기에

직접 평면도를 작성했음을 알려준다.

“소화3년도 예산으로 신설하게 된 군산부청의 부지는 현 군산소학교 교정을 충당하기로 결정하여 이미 설계를 끝내고 곧 본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sup>34)</sup>

“마산부청 이전문제는 부 당국에서도 최근에 궐하야는 그 실현에 최대 노력할 심산으로 그 설계 예정의 개안(概案)까지 수립된 모양이라는데...”<sup>35)</sup>

“대구부청사 이전·신축문제가 대두되어 동부(同府) 당국에서는 서둘러 영선계에서 설계안을 작성중이었는데...”<sup>36)</sup>

정리하면,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최종 설계한 6개 부청사(경성·군산·신의주·인천·부산) 중에서 2개(경성·인천부청사)와 최종설계 주체를 모르는 3개 부청사(군산·마산·대구) 계획안이 신축 인가신청 단계에서 부 건축조직에 의해 작성되었다.

도·부청사 신축에서 도·부의 건축조직이 초기에 설계를 맡은 것은, 도·부가 도·부청사 신축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에 도면을 첨부하는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규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지방청이 하천·제방·수리·항만 혹은 상·하수 공사(간단한 공사나 수선공사 제외)를 할 경우 각 도장관은 공사시행전에 미리 그 계획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한 토목 관련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sup>37)</sup> 도·부청사 신축도 이와 유사한 조건이 성립되었으리라 추측된다.

2.2에서 설계자를 확인한 신축부청사 6건(경성·인천·부산·군산·평양·신의주) 중 평양부청사를 제외한 5건이 중앙관서 건축조직의 설계로 지어졌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은 신의주부청사를 제외한 4건을 초기에는 부 건축조직이 설계했다. 또한 설계자를 확인하지 못한 신축 부청사 7건 중 2건(군산·마산)과 신축에 이르지 못했지만 신축계획안이 작성된 1건(대구부청사)도 초기에는 부 건축조직이 설계안을 작성했다.

### 3.2. 설계안의 변경

그렇다면 도·부의 건축조직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청사 설계안에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안을 수정할 여지는 있었을까.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신축 추진 초기, 부의 설계안에 대해 경성부 부위원회가 소집되어 설계안을 논의하고 대구부가 작성한 설계안에 대한 도의원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등, 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

34) 朝鮮と建築 7집 4호, 1928.4, p.73.

35) 마산부청사 이전신축계획 중앙지대로, 동아일보 1929.5.8.

36) 朝鮮と建築 12집 4호, 1933.4, p.60.

37) 조선총독부 훈령 제15호, 조선총독부관보 1912.11.11, 이에 대해서는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65 참조.

31) 백만원의 공사비로 신축할 경성부청사 문제, 동아일보 1922.11.17.

32) 朝鮮と建築 2집 5호, 1923.7, p.45.

33) CJA0002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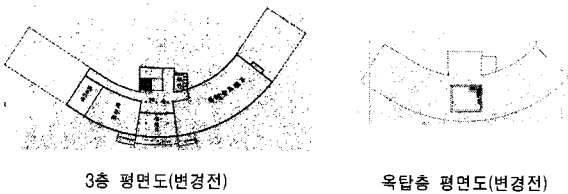
“부청사 신축문제에 취(就)하야는 금반(今般) 당부(訪府)의 제(際)에 총독·정무총감의 양해를 득(得)하얏스즉 경성부에서 설계서를 작제(作製)한 후 갱(更)히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6시 반에 산회하얏다더라.”<sup>38)</sup>

“부에서는 근일중(近日中)으로 부회의원간담회를 소집하고 신축예산 및 설계도를 제시하여 찬동을 구하기로 하였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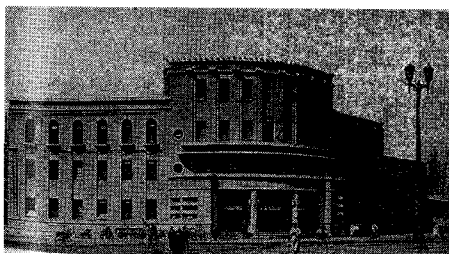
부 건축조직이 설계한 평양부청사는 부윤의 의견이 반영되어 설계안이 변경된 사례이다. 평양부 건축기수 제방조의 설계안에 대해 아부(阿部) 평양부윤이 설계변경을 명한 것이다.

“평양부청사의 개축 설계안은 堤 기수의 손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3층 위에 있는 탑은 단순한 외관적 탑에 불과하다. 아부(阿部) 부윤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提) 기수에게 통지했고, 제 기수는 탑의 폭을 확대하여 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고쳤다. 이로써 종래 3층이 일견 4층처럼 되어 훌륭한 위관을 드러내게 되었다.”<sup>40)</sup>

<그림 8> 우측의 옥탑층 평면도(변경전)이 인용문이 말하는 “단순한 외관적 탑에 불과”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평양부윤이 4층을 室로 사용하도록 넓힐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 <그림 9>에서 보듯 “3층이 일견 4층처럼 되어 훌륭한 위관”이 되었다.



<그림 8> 평양부청사의 3층·옥탑층평면도(변경전)  
출처: CJA000399



<그림 9> 신축된 평양부청사 전경  
출처: 손정목(2001)

부산부협의회 한 의원은 중앙관서의 설계안에 불만이 있었던지, 설계안이 작성되는 동안 외관·채광조건이

좀 더 양호한 다른 안을 구상했다. 아래 인용문이다.

“현재 본부 토목과에서 설계중인데, 부 협의회원 중에는 현재의 청사 부지를 절하(折下)하여 남향으로 건축하는 것이 외관과 채광에 좋지 않느라 라며 상당히 연구를 더하고 있다.”<sup>41)</sup>

다음 인용문은 중앙관서 설계의 인천부청사 계획이 인천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되었음을 알려준다.

“인천부청사 신축설계는 본부에서 최근 완성되어 7월 21일 가이전(假移轉) 직후 드디어 기공하게 되었는데, 새로 생기는 청사는 거의 부 당국 요구대로이고, 벽돌·철근 혼합 2층이다.”<sup>42)</sup>

또한 3.1에서 살펴봤듯이, 함경남도는 중앙관서가 작성한 평면도에 대해, 비록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면적을 증가한 새 평면도를 제시하면서 설계안 변경을 신청했다. 더구나 아래 인용문에서 1928년 당시 경기도 회계과 영선주임이던 제방조는 설계안이 결정되기까지 설계변경이 매우 잦았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도·부청사에 한정된 언급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었을 것이다.

“건축설계라고 말하면 일반인은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실제 플랜의 결정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한 파란극질이 있다. 도면만 기계적으로 그리면 10일이면 충분한 설계라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정정에 더하여 정정, 변경에 더하여 변경, 어떤 경우는 근본부터 변경되는 일도 있다. 특히 연필 마감 평면도를 결정하기까지 1개월 이상도 요구되고 때로는 수개월을 넘기는 일은 진기하지 않다.”<sup>43)</sup>

이상의 자료들에 의하면, 부의 부윤이나 도·부의 의결·자문기관(1920년대 도평의회·부협의회: 자문기관, 1930-40년대 도회·부회: 의결기관)<sup>44)</sup> 해당 도·부 건축조직의 계획안 뿐 아니라 중앙관서 건축조직의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변경을 유도했고 설계안이 변경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일제강점기 신축된 도청사·부청사의 설계주체와 설계 과정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제강점기 신축된 도·부청사는 이원화되어 운영된 조선총독부 설계조직, 즉 중앙관서 건축조직과 소속관서

38) 부청사 신축문제, 동아일보 1922.5.21.

39) 총공비 50만원 대구부청사 신축, 매일신보 1940.6.24.

40) 朝鮮と建築 12집 3호, 1933.3, p.58.

41) 朝鮮と建築 8집 4호, 1929.4, p.98.

42) 朝鮮と建築 11집 8호, 1932.8, p.32.

43) 堤芳助, 京畿道の營繕工事實況, 朝鮮と建築 7집 6호, 1928.6, p.8.

44) 일제강점기 1920년대 도·부의 자문기관으로서 도평의회·부협의회 및 1930-40년대 의결기관으로서 도회·부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서울, pp.171-336 참조.

(도·부) 건축조직에 의해 설계되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설계주체가 결정되었는지 직접 해명해 줄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기존 도청소재지 관·민의 의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도청소재지의 이전·화재로 인한 도청사의 전소 등 특수한 사정 탓에 소속관서 설계가 어려운 경우, 초기부터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설계했다. 그 외 일반적 경우의 신축에서 설계주체는 소속관서가 맡는 경우와 소속관서에서 중앙관서로 달라지는 2가지 경우가 있었다. 도·부가 신청사 신축허가를 상위 기관에 신청하는 전반부에 면적·층수·구조까지 결정하고 설계안(배치도와 평면도)을 첨부하는데, 이 첨부도면을 도·부의 건축조직이 작성했다. 허가가 난 뒤 후반부에는 도·부의 건축조직이 설계를 계속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설계안을 다시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그 결정이 어떤 이유나 조건에서 내려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설계주체가 전·후반부에 달라지는 경우에도 도·부 건축조직이 작성한 초기 설계안은 현실적·기술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해당 도·부가 필요로 하는 규모·공간구획·실용도 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설계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해당 도·부이므로, 이 조직의 설계가 자연스럽다. 기술적으로 이 설계안은 조선총독부가 신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비와 국고보조금을 결정하며<sup>45)</sup> 중앙관서 설계조직이 도·부의 요구를 수용한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설계과정에서 설계변경도 있었다. 전반부에는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도·부의 자문·의결기관의 의견이 소속관서 건축조직에 전달되거나 부윤과 같은 고위관료의 의도가 설계안에 반영되었다면, 후반부에는 문서형식으로 도·부의 의견이 중앙관서 건축조직에 전달되고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일제강점기 지방관청의 건축사업은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설계와 공사를 주도하고 소속관서 건축조직은 이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금까지의 인식과는<sup>46)</sup> 어긋나는 점이 있다. 즉, 도·부청사 신축에서는, 도·부의 건축조직이 전반부에 주도적으로 설계안을 마련했고 그대로 신축되기도 했다. 또한 도·부의 구성원은 소속관서나 중앙관서 설계안에 변경을 요구할 제도적 장치가 있었고 실제로 변경되는 사례도 있다. 물론 허가권을 가진 중앙관서 건축조직이 도·부청사 설계·공사 전반의 통제했겠지만, ‘일반적 경우의 신축’에서 소속관서 건축조직이 적어도 전반부에는 설계를 주도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부청사의 경우 자료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잠정적인 결론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한편, 몇몇 도·부청사 설계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모두 기수 직급이다. 기수 직급이 10명 이하의 직원을 데리고 도·부청사 설계를 맡은 것이다. 중앙관서에서 조직을 이끈 인물의 변화가, 소속관서에서는 중앙관서의 설계경향과는 구별되는 기수 개인의 개성과 취향이 설계안에 반영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이는 추가자료의 발굴이 필요한 별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京城府, 京城府史 2, 京城府, 京城, 1941
2. 東亞日報(1920.4.1-1945.8.31)
3. 每日新報(1910.8.30-1945.8.31)
4. 朝鮮と建築(1921.6-1940.12)
5. 朝鮮總督府公文書(국가기록원 소장)
6. 朝鮮總督府官報
7. 平壤府, 平壤府勢一斑, 平壤府, 平壤, 1936
8. 함경남도지편찬위원회, 함경남도지, 함경남도지편찬위원회, 1968
9.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청사 평면의 변화,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1호, 2008.3
10. 김명선, 일제강점기 신축된 도청사·부청사의 평면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5호, 2008.5
11.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청사 및 부청사의 양식적 특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2호, 2008.6
12.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시부분장과 도청사의 규모 및 평면구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3호, 2008.9
13. 김명선·박정대, 일제강점기 도청사·부청사의 건립,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4권 제2호, 2008.2
14.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문화재청, 충북도청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15.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서울, 1996
16.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서울, 2001
17. 송석기, 한국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양식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8.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9. 이금도·서치상, 1936년에 완공된 부산부청사의 입지와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11
20.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환경계획 연구실·문화재청, 구 인천부청사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문화재청, 충청남도청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22. 홍순연·김기수, 경상남도 청사의 변천과정과 재료 및 구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3권 9호, 2007.9

[논문접수 : 2011. 01. 31]

[1차 심사 : 2011. 02. 20]

[게재확정 : 2011. 04. 08]

45) 조선총독부의 도·부청사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공사비 전체의 1/3 정도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명선·박정대, 일제강점기 도청사·부청사의 건립,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4권 제2호, 2008.2, p.204 참조.

46)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건축사업과 일본인 청부업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65-66.